녹색성장, 지역의 삶과 번영의 길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 지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마땅치 않다. 대도시도 그러하지만 특히, 중소도시가 그러하다. 화장품 대리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으며, 의류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지역이 전자상거래 망으로 즉각적으로 연결되고, 도로통행의 발달로 '시-공간'이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균질(均質)한 상품의 경우, 이것의 구매를 위해 발품을 팔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이 오히려 저렴하기까지 하다.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로의 시간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 선택이 필요한 제품까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 우리네 삶의 '정처'(定處)가 특정지역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분산할 것인지를 관측해보는 것이 그 동안의 주요한 관심사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영향이 맞추기 어려운 퍼즐식이라 어느 지역이나 예외가 아니지만,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에 유리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토통합적 '흐름의 공간요소'와 달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회가 되는 요소도 있다. '고정된 공간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질주로 비견되는 '녹색성장'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점을 살려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의 중요성에서는 대도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녹색성장은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조화, 특히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수단이 되는 국가 및 지역의 발전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 그러면 녹색성장에서 지역의 위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중소도시나 저발전 지역은 환경보존, 환경가치에서 대도시 등에 견주어 유리한 지역적 자산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서울 등 대도시는 경제성장이나 경제여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은 음의 상관관계(r=-0.79)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의 정도가 높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 환경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소도시 등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하위를 차지하여 환경가치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다.

【 경제성장 상위 및 하위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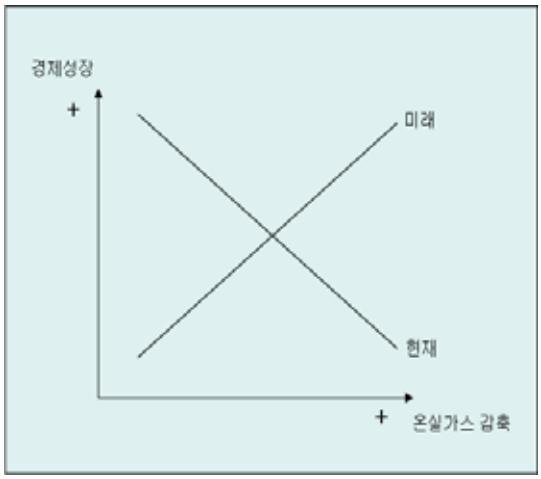
순위	경제성장 상위지역		경제성장 하위지역	
	지역	온실가스 배출순위	지역	온실가스 배출순위
1	강남구(서울)	15	영양군	231
2	중구(서울)	38	신안군	202
3	서초구(서울)	30	진안군	219
4	용인시	8	봉화군	218
5	안산시	7	청송군	232
6	성남시	22	장수군	207
7	영등포구(서울)	42	구례군	221
8	양천구(서울)	85	순창군	206
9	송파구(서울)	36	함평군	183
10	수원시	12	진도군	201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7) ; 고재경(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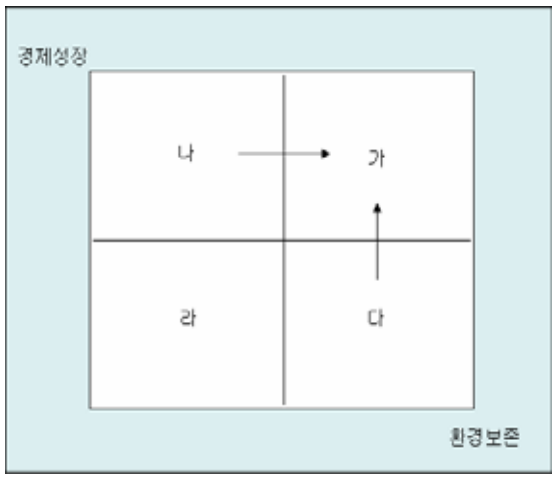
그래서 자치단체의 녹색성장의 현주소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경제성장이 비례하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이 함께하지 못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경제성장은 이루고 있지만 환경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치 (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는 환경보존이 양호하지만 경제성장은 좋지 못한 위치 (다)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반드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동조화'(coupling)에 의한 녹색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대도시 등은 환경을 보존, 향상시키는 전략을 통해,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환경과 경제가 함께하는 발전(가)으로 가야한다.

【지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관계】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관계별 녹색성장】



지역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총합이 국가의 녹색경쟁력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은 OECD 국가가운데 그리 높지 않다(11위, 삼경경제연구소; 2008). 이점은 자치단체가 고양된 환경가치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성장의 녹색성장을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화석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저감시키는 전략과 화석에너지를 태양, 바람, 지열, 바이오매스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환경보존 → 경제성장 → 환경보존 → 경제성장의 구조 속에서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같은 구조와 원칙 속에서 첫째, 자치단체는 경제성장과 환경가치 측면의 현주소에 대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이들의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녹색성장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전략의 수립에서의 큰 방향은 청정에너지 기반의 경제를 틀거리로 잡아야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정에너지 기반 녹색성장이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에너지 투자보다 3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력별에 있어서도 대학 혹은 대학 이상에게는 2.6배, 전문대급 졸업자는 3배,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3.6배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009).

둘째,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의 프로파일이 나오면, 그 다음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보존 등 녹색가치가 부족한 지역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

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산업적 측면의 녹색화 시책일 수도 있고, 생태숲 조성, 건축물의 녹색화 등 생태 및 인공 측면의 녹색환경 조성시책일수도 있다. 반대로 녹색가치는 풍부하지만 산업적 일자리 등 경제성장이 부족한 지역은 건축물의 녹색화 등 녹색가치를 보다 향상시킴과 동시에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물론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중간인 지역은 이들 양자를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환경측면과 경제측면 양자의 공통적 향상요소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공급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이 좋은 지역은 풍력을, 태양에너지가 좋은 곳을, 지열 및 바이오가 좋은 곳은 이에 기반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양 유형의 지역 모두 녹색성장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녹색성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추진체계, 재원, 규칙 및 조례 등이 해당된다.

녹색성장에 '일'이 있고, '삶'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여건과 특성에 기반해야 한다. 전국이 획일적인 시책의 백화점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된 명품전략을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녹색성장은 개인들의 의식에서 나옴을 감안할 때, 종래의 인식 및 문화, 생활습관을 청정에너지 지역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차원의 의식전환 운동이 선행될 때 지역들은 보다 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